

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잡아야 성공 가능

백년포럼 31강서 윤강로 원장, “향후 2년간 선제적 유치운동 필요·국제사회 공감 얻어내는 전방위 노력 전개해야”

전주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유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IOC 문화 및 올림픽 헤리티지위원회 위원으로 국제 스포츠외교 전문가인 윤강로 원장(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특강을 통해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할 경우 첨예일도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의 향후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대표 유치 후보 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전략과 비전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윤 원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실패사례를 분석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치 도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기사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해 호주가 무릎입성하는



전북 백년포럼이 지난 13일 전북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호주는 막판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반면 서울은 미온적 대응에 그쳐 유치에 실패했

다”고 회상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

기로 했으나, 전제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이용하겠다는 호주 브리즈번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다.

그는 “과거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적 공감 확보가 필수”라면서 “특히 2036년은 손기정 옹의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전북의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2025~2027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내의 홍보 강화 △IOC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스포츠외교 TF팀 구성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전북 전주하계올림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만호 기자

도, 기업과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는다

봉동산단 알에프세미 방문…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해법을 기업과 함께 찾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 원주군 봉동산단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기업 (주)알에프세미를 방문해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의 첫 간담회를 열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연말까지 도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15곳을 차례로 방문해 저출생 대응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자치도와 인공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반재용 알에프세미 대표, 육명진 인공보건복지협회 본부장,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눴다.

1999년 설립된 알에프세미는 남성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도 준비 중이다.

알에프세미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남아 있는 동료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실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천영평 실장은 “이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해 제도 개선과 예산 인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실천 중심의 현장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도 전역으로 변화의 흐름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만들기’ 박차

‘청년유출입 대응 정책 발굴 간담회’ 개최… 55개 정책 제안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청년의 실질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 유출입 대응 정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허브센터·전북연구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참여단·시군청년협의체 등 8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와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승길 대표의 특강 ‘청년정책 실행사례와 정책화 과정’으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청년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실제 경로와 실행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내 청년유출입 대응 TF를 통해 발굴한 6개 분야 55개 사업을 소개하고, 시군 청년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주체”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 발굴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에서 세계로’… 전북 크루즈 관광시대 도약 신호탄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 본격 시동… 착수보고회 개최

TF팀 구성·협약·전문가 회의 거쳐 현장 실행 단계 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과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크루즈 유치 기반 강화와 실무 협력 확대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항 팬스타 드림호(2.2만 톤급) 선상에서 열리는 위크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숍에 참가했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청, 한국해양관광학회, 한국크루즈포럼, 여행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정책 동향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참여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크루즈 유치 준비사항을 홍보했다. /이만호 기자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관광장은 “내년 말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전북만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연계해 크루즈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1년 도민 체감 현장 중심 치안정책 추진

자치안전망 구축·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강화, 치안행정 효율화 등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범죄예방, 디지털 기반 스마트 치안모델 구축

전북대학교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범죄 취약지 분석모델을 구축 중이다. 이는 공간정보(LX플랫폼)와 치안 데이터를 융합해 범죄 다발지점과 CCTV 사각지대를 예측·분석하는 안전모델 구축 사업으로,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대학교와의 기관 간 역할분담 협약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R&D)’도 주목된다. 지난 4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총 1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자율 순찰로봇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과 공중화장실 물대 카메라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해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개선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으로 도민의 일상생활 안전 강화에 나선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3개 시·군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도비 3억2,000만원과 시·군비 7억4,800만원을 매칭해, 지역 내 범죄 취약지 1개소(블록 단위)에 집중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또한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특색에 맞는 범죄 취약지역을 공모 선정해 시·군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도민 일상 속 체감치안 강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는 현재까지 5,155명이 등록했으며, 올해 1,000개 카드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개인 전화번호 대신 안심주차번호 1577-5350 또는 QR코드를 통해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어 여성 대상 범죄나 보

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령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체 연간 100회 교육을 목표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 100개 기관에서 6,000여명에게 금융사기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고도화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14개 시군, 745명이 활동 중이며 초등학교 274개교에 배치되어 통학로 및 놀이터를 순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지도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정보를 표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은 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도 도민안전실과 협업을 통해 도민 안전보험의 범죄피해 보장 범위를 강도에서 살인·상해·강간·폭력 등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등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주년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록 외국인 포함 전 도민이 자동 가입되며, 범죄 피해 시 도민에게 실질적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협의체는 참여 기관을 기존 14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하고 법률·의료·주거 개선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3가정에 798

불필요한 시간대까지 적용되던 일률적 속도제한 개선을 위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 중이며, 현재 17개소를 대상으로 주간 30km/h, 야간 50km/h 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9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도로교통청,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대한노인회,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체 시군 현장에서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0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적 치안 거버넌스 정착·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노력

전북 자치경찰은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기구(정책자문협의회, 과학치안자문단)를 통해 도내 치안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자율방범대 6,400여 명이 실종자 수색, 장터 순찰 등 연 600회 이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또한 남원시에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경찰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만호 기자